뉴욕 테러 사건의 교훈과 상생의 민족공동체

백낙환 /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

21세기도 전쟁으로 그 서막을 여는가? 또 전쟁이다. 미국의 아프간 공습이 그것이다. 뉴욕 테러 참사에 대한 미국의 ‘보복과 응징’이었다. 뉴욕 테러는 수천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실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명분이야 어떠하든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쟁 역시 테러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는 일이다. 테러와 마찬가지로 전쟁 역시 무고한 생명만 앗아갈 뿐, 테러의 근절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복테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아랍 사이에 지난 50 여 년간 반복되어온 테러와 전쟁, 그 상호 보복과 응징의 역사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죽음이 죽음을 낳는 피의 악순환으로서 상극(相剋)과 상살(相殺)의 정치이다.

이번 테러는 미국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에 대해 강경책을 구사하는 이스라엘 샤론 정권을 무조건 지지하는 등 힘의 정치에 바탕을 둔 부시 미행정부의 일방적이며 독선적인 對중동 강경 정책이 그것이다. 여기에 극소수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테러로 도전·저항한 것이다. 강경과 강경, 힘과 힘의 충돌로서 그 귀결점은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었다. 이것은 힘의 정치에 바탕을 둔 강경책이 결코 평화의 궁극적 보장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화합과 평화, 상생의 정치가 필요하다

진정한 평화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상생(相生)의 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류는 하나의 생명공동체, 상생의 평화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인간·생명·평화,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인류의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 존중의 생명과 평화가 아닌 인간 경시의 죽음과 폭력을 추구하는 테러와 전쟁은 모두 반인륜적 행위로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

다. 모든 갈등과 분쟁은 상생의 원리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것은 힘의 정치가 아니라 화합과 타협의 정치이다.

미국 역시 전쟁부터 생각하기 전에, 형(兄)의 위치에서 먼저 화합과 타협의 정신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테러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아랍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큰 아량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사고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하며, 이때 비로소 테러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힘의 대결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남북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지난 50 여 년 동안 남북 관계는 힘의 대결에 바탕을 둔 상호 불신과 반목의 상극 관계로 점철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있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 · 15 남북공동선언은 기존의 남북 관계를 평화 · 공존과 화해 · 협력의 상생 관계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이것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에 바탕을 둔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햇볕 정책의 소중한 결실이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6 · 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실천하고, 이를 통해 화합과 평화, 상생의 민족공동체로서 진정한 민족 통일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 여당의 대북 포용 정책, 햇볕 정책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반발과 비판도 만만치 않아 마치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듯한 형국이다. 하지만 지난 50 여 년간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 힘의 대결에 바탕을 둔 강경책은 남북한 사이에 상호 불신과 반목, 긴장만 더했을 따름이다. 그것은 평화와 상생의 정치가 아니라 갈등과 상극의 정치였다. 그러나 21세기 평화와 상생의 민족공동체를 위해 이러한 정치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뉴욕 테러 사태는 힘의 대결에 바탕을 둔 상극의 정치로는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족 상살의 극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쟁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교훈 역시 한반도 문제는 남북 공멸의 대결과 상극의 정치가 아니라 남북 공승(共勝: win-win)의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일 터이다.

이념적 대결과 상극의 냉전 의식에서 벗어나야

그럼에도 야당과 일부 언론이 20세기의 냉전적 구습에서 아직껏 대결과 상극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젠 야당과 언론 역시 21세기의 시대 정신에 맞게 화합과 평화, 상생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에 기회를 주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뉴욕 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힘의 외교가 아니라, 국가 중대사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초당 외교이다. 우리의 경우 적어도 통일 문제에서만큼은 정략적 관점에서 벗어나 민족적 관점에서 여야 타협에 기초한 초당 외교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 햇볕 정책에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을 ‘ 퍼주기론 ’으로 비판하는 것도 그러하다. 현실적으로 대북 지원의 반대 급부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국간 대화, 이산 가족 상봉, 민간 교류 등 북한을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 유도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가져온 것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개혁 · 개방을 유도하고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독일 통일을 주도한 서독의 경우 17년 동안 동독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경제 지원을 해왔던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대북 지원 문제 역시 새로운 높이에서 보다 크고 넓게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남북한의 체제 대결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남한만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 비전과 전망 하에 남북한이 함께 하는 민족 경쟁력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 남북한의 소모적인 경제 대결은 민족 공멸의 길이다. 21세기 우리 겨레의 길은 이념이 아니라 실익을 중심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상생의 민족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남북 공영의 국가 경쟁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햇볕 정책과 이에 바탕을 둔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냉전과 상극의 20세기적 낡은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21세기적 시대 정신에 걸맞는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이다. 남남 갈등, 보혁 갈등, 이념 갈등, 사회 갈등 등의 용어로 우리 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행위 역시 이념적 대결과 상극의 냉전적 사고에 다름 아니다. 지금은 여야와 이념의 차이를 떠나 민족적 실익의 관점에서 화합과 평화, 상생의 정신으로 국론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야 할 때이다.